

KIS '소수민족 정책' 세부의제

다음은 각국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세부과제입니다.
각국의 발제자들은 각국에서 재외한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이주민/정주민, 선주민, 숫적.정치적 소수민족)
발제문을 작성해주세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0. 각국의 소수민족의 정의방식과 소수민족의 구성

- 이주민(한시적 이주노동자/ 세대를 거듭하며 영구 정착하는 정주민)
- 선주민: 국가성립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민
- 숫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소수민족: 특정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숫적으로 소수민으로 존재하여 사회적.문화적 소수민족으로 간주되는 이들
- > 이 구분은 작위적인 것이라 각 소수민족의 지위가 이 개념에 딱 맞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구분을 하나의 예로 참조하셔서 각국의 소수민족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각 소수민족의 구성과 간략한 역사 요약

2. 각국의 재외동포(재외한인)들은 위의 소수민족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재외한인의 각국에서의 소수민족적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다민족국가의 경우: 다양한 민족들의 통합의 과정에서 취해진 소수민족 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 국민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적 부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4. 소수민족의 정치적 권리: 그 사회의 '다수민족'과 비교

- 1) 시민권, 영주권 획득의 과정
- 2) 참정권 및 피참정권(소수민족의 정치적 참여와 제도)
- 3) 세금 납부와 사회복지의 혜택: 의료보험 및 사회복지 혜택
- 4) '본국'과의 관계: '본국'에서의 정치적 권리(이중국적 및 출입국 문제)
- 5) 민족자치의 문제(소수민족/선주민/이주민): 영토권 문제 및 소수민족의 민족자치 정치참여 상황
- 6) 노동허가문제(이주민)

5. 경제적 권리: 기회의 균등

- 1) 취업의 기회
- 2) 경제활동영역: 노동의 종류, 계급적 위치
- 3) 은행대출 및 사업체 설립 제도의 평등
- 4) 토지소유권 문제

6. 사회문화: 민족, 문화 정체성의 형성, 유지의 상황

---> 갈등적인 상황

- 1) 언어교육(공식어와 민족어간의 관계)의 현실과 문제점
- 2) 결혼(민족간 결혼의 선호와 상대정도)의 현실적 상황
- 3) 민족교육기관의 설립과 지원
- 4) 민족교육과 공식교육(민족교육은 공식교육제도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 5)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및 복지 혜택
- 6) 종교정책
- 7) 생활문화방식의 유지
- 8) 민족생활공동체의 상태와 변화방향

<의제개발 질문지 2>

KIS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세부의제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발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들 이외에도 추가로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더해 주셔도 됩니다.

0. 자국적 부여 방식

- 기본적으로 혈통주의인지, 출생지주의인지?

1. 재외동포의 정의와 구분

- 재외국민, 외국적 동포(무국적 포함), 귀국동포 등의 구분이 있는지?
- 자국민이었다가 국적을 바꾸어 외국인이 된 자들이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특히 출생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궁극함)
- 우리나라 재중동포(조선족), 재CIS동포(고려인) 같은 경우, 한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해외에 살던 자들이거나 그 후손임.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재외동포들이 있는지?(국민 국가 수립이전 해외로 이주한 이들은 재외동포로 포함되는지)

2. (가장 최근 통계로) 각국 재외동포 분포 현황

3. (개괄적으로) 재외동포 형성의 역사: 각국의 이주사 및 정책 형성의 배경

4. 재외동포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지?

- 재외동포 관련 기관 및 지원사업 측면에서
- 출입국 및 체류 측면에서
- 자국에서의 재산권 및 정치참여 권리의 측면에서
- 국적취득 측면에서

5. 재외동포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있는지?

- 법률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주사업은 무엇인지?
- 예산은 어느정도 책정되는지?

6.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비교해 외국적 동포에게 취하는 우대조치가 있는지?

- 외국적 재외동포 출입국 및 체류 조건 측면에서
- 외국적 재외동포 국내 거주시 진학, 취업, 사회보장, 재산취득 측면에서
- 외국적 재외동포 국적취득 측면에서

7. 재외동포 기본정책방향 및 재외동포 지원사업

- 재외국민, 외국적 동포, 귀국동포 각각에 대해
- 교육 및 문화지원사업 등 국외거주 동포들에 대한 민족정체성 유지 방향
- 재외동포를 위한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8. 재외국민 참정권은 보장되는지?

※ 용어정의(아래 용어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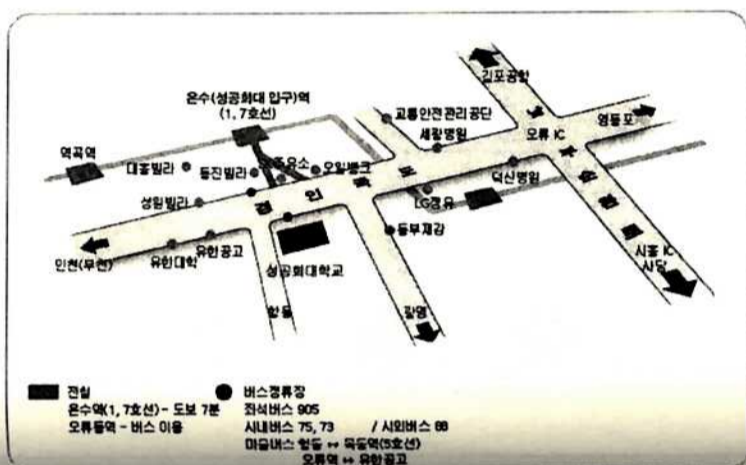
- 재외국민 :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자
- 외국적 동포 : 한민족 혈통을 지녔거나 한국국적을 지녔던 자 중 외국적을 취득한 자나 그 후손
- 귀국 동포: 과거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적 동포)였다가 국내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자

수 령 증	₩	일 금 목 화 수	아래 본인은 2002년 11월 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추진위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함	수령자 신분번호 주소 연락처	서 명
	과				
	내				

수 령 증	₩	일 금 목 화 수	아래 본인은 2002년 11월 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추진위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함	수령자 신분번호 주소 연락처	서 명
	과				
	내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심포지엄 오는 길



이사가아일출민족: 재일 조선인

- 일시 : 2002년 11월 23일(토) 낮4시 ~ 25일(월) 낮2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4층 7417호
- 참가비: 전일 2만원, 부분 1만5천원(자료집, 식사 제공)
- 접수 : 017-284-9860, rosalex@hanmail.net <접수마감 11월 20일>
011-496-1947

주최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성공회대학교 NGO학과

초청합니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추진위원회가 꾸준히 준비해 온 심포지엄이 11월 23-25일 성공회대학에서 개최됩니다.

이 심포지엄은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의 재외동포들을 초청하여 각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검토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각 발제에 대하여 한국사회 내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내용들이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한국사회 소수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심포지엄이 생산적인 토론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국외 6개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비교·검토

첫째날 23일 토

<여는마당> 낮 4시
참가자인사, KIN 및 KIS 소개, 문화공연

<제1마당> 저녁 7시
최인나(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한국문학 전임강사)
양옥금(중국 연변대 민족학 교수)

둘째날 24일 일

<제2마당> 아침 10시
송승재(일본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신효진(독일 베를린대 음악대학원생)
최영숙(독일 한독문화협회 회장)

<제3마당> 낮 1시
김대영(미국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김범진(브라질 한인회 부회장)

<제4마당> 낮 3시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종합토론

셋째날 25일 월

<제5마당> 아침 10시
한국정부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닫는마당> 낮 1시
선언문 채택



- 수 신 :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
- 참 조 : Mr. Chun-bok Lee, Consulate Section
- 발 신 :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KIS 준비위원회 김영희
(연락 82-11-496-1947 이메일 hi007@hotmail.com)
- 일 시 : 2002. 10. 22. 화(요일) (총 1 page)

초 청 장³⁾

이 름 : 최이나 Inna Tsoi
 국 적 : 러시아
 생년월일 : 0000.00.00.
 여권번호 : XXXXXXXXXX, till 2005.02.03.
 초청목적 : 심포지엄 발제자
 방문기간 : 11월 22일 ~ 11월 26일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는 1999년 결성되어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바로 알리는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Non-Governmental 시민단체입니다.

상기인을 200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본 단체의 심포지엄 KIS(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에 발제자로 초청하는 바입니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 배 덕 호 (직인)

3) 최이나 러시아 발제자와 양옥금 중국 발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초청장 내용 중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는 기호로 표시함



- 수 신 : 재중 한국대사관
- 참 조 : 비자발급 담당
- 발 신 :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KIS 준비위원회 김영희
(연락 82-11-496-1947 이메일 hi007@hotmail.com)
- 일 시 : 2002. 10. 30. 수(요일) (총 1 page)

초 청 장

이 름 : 양 옥 금
 국 적 : 중 국
 생년월일 : 0000.00.00.
 여권번호 : XX XXXXXXXX till 2006. 4. 21.
 직 업 : 교수 (연변대학 민족학)
 초청목적 : 심포지엄 발제자
 방문기간 : 11월 22일 ~ 11월 26일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는 1999년 결성되어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바로 알리는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Non-Governmental 시민단체입니다.

상기인을 200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본 단체의 심포지엄 KIS(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에 발제자로 초청하는 바입니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 배 덕 호 (직인)

<이메일 공지 문안>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 발제에 응하신 분들께
KIS 추진위에서 공지 드립니다.

수신: 노영돈 교수, 양영미 간사, 이준식 박사, 이종훈 박사
이진영 교수, 조혜영 박사, 최금좌 박사님께

안녕하세요. KIS 추진위입니다.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의 발제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KIS 의제는 △재외동포의 이주역사와 현황 △국의 6개국의 소수민족(혹은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 △국의 6개국의 재외동포(혹은 재외국민) 정책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이상 4가지입니다.

이중 상반기 공개세미나에서는 앞의 의제 두 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에 앞의 두 의제와 관련해 KIS 추진위에서 궁금한 세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발제자님들께서 발제를 준비하실 때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제 1 - 재외동포 이주역사와 현황

- ◇ 재외이주 당시 국내 및 이주국의 상황
 - 한반도를 떠나 재외이주를 하게 된 상황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 재외이주자에 대한 당시 한국정부의 정책
 - 재외이주한 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황
 - 재외이주자에 대한 당시 이주지역 정부의 정책
- ◇ 재외이주 후 정착과정(재외동포 사회의 역사)
 - 초기 정착시 재외동포의 주요생계 수단
 - 정착과정에서의 인구 및 거주지역의 변화
 - 세대를 거듭하면서 재외동포들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 재외동포들에 대한 이주지역 정부의 정책적 변화 (우대조치 혹은 탄압사례)
- 민족적 정체성 유지방법 혹은 쇠퇴 이유 (언어, 역사, 문화, 교육 등)

- ◇ 거주국 내 재외동포들의 위치(재외동포의 현황 및 과제)
 - 재외동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 주요생계수단 및 다수직업, 재외동포들의 성공사례
 -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 재외동포들의 공동체 결성 상황 및 단체 현황
 - 재외동포사회의 과제

□ 의제 2 - 국외 6개국의 소수민족(혹은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

- ◇ 소수민족 현황 및 소수민족 관련법 유무
- ◇ 이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관행들 및 각종 인권보호와 우대조치
- ◇ 외국인의 국적취득 조건과 절차 및 취업·사회보장 제도
 - 이주자에 대한 이민정책 혹은 출입국 관련 정책 개요
 - 장기체류외국인 관련법 유무 (있으면 개략적 내용)
 - 영주권 혹은 시민권(국적) 취득 절차
 - 비영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 비교
 - 장기체류 외국인 현황 및 문제점

아울러 보다 생산적인 세미나를 위하여 **발제문은 발제 1주일 전까지** 정리해 e-mail(likebird@jinbo.net)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자료 1-2개 정도를 추천**해 주시면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미리 나눠 읽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외동포의 인권옹호와 교류·연대를 위해 직장생활 짬짬이 시간을 내어 공부하고 활동하려는 청년들의 열정과 끈끈한 만남을 약속드리면서,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 문서번호 : KIN2002-KIS추-0507-01
- 수 신 : 서울대 국제지역원, 연세대 지역학대학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센터
- 발 신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추진위원회 (담당: '범용'이, likebird@jinbo.net)
- 제 목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 모집공고문 부착 협조요청
- 일 시 : 2002. 5. 7. (화요일) (총2pages)

1. 학문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귀 부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은 99년 창립된 민간단체로, 국외 재외동포들의 인권 향상과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재외동포는 전세계적으로 570만에 이르고 있고, 각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IN은 재외동포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연대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역사인식과 세계관에 대한 지평을 넓히려 합니다.
4. 이에 6차례에 걸쳐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를 기획하고 참여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 부서에서 별첨한 공고문을 학과 게시판에 부착하시어 모집에 협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모집]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 참여하실 분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직인생략

[모집]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 참여하실 분

- ◎ 재외동포들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
- ◎ 재외동포 문제를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
- ◎ 진보적인 재외동포 청년들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분
- ◎ 한민족 중심의 폐쇄적 공동체를 넘어 열린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에 관한 6차례의 공개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미, 독일, 미국, 일본, 중국, CIS(구소련) 등 6개 지역 재외동포들의 이주사를 정리하고 각국 소수민족 정책 및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기본발제를 듣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

- ◇ 상반기 3차례 : 재외동포 이주사 및 각국 소수민족 정책을 중심으로
 - ◇ 5월 25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남미 - 최금좌(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상파울루 주립대 박사)
 - 미국 -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 철학박사)
 - ◇ 6월 1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독일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베를린 자유대학 석사)
 - 중국 - 이진영(경희대 교수)
 - ◇ 6월 8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일본 - 이준식(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 CIS - 노영돈(인천대 교수)
- ◇ 하반기 3차례 : 각국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을 중심으로
 - ◇ 일정 - 8월 3일, 8월 24일, 9월 7일
 - ◇ 발제자 - 미정

- △ 주최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 문의 : 02-735-4327, kin@kin.or.kr, 배덕호(016-402-4327)
- △ 모집기간 : 2002년 5월 15일까지
- △ 참가비 : 6차례 5만원, 3차례 3만원



- 문서번호 : KIN2002-정책교육실-1105-01
- 수 신 : 심양 한국영사관
- 참 조 : 수신처 참조
- 발 신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담당 : 김영희 +82-11-496-1947)
- 제 목 : 심포지엄 발제자 초청에 따른 협조요청
- 일 시 : 2002. 11. 5. (화) (총 1 page)

1.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귀 영사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1999년에 결성되어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비영리시민단체입니다. KIN은 재미동포의 모국방문 프로그램(Korean Exposure & Education Program)인 KEEP의 한국측 파트너로 만4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울시 프로젝트인 재일동포 초청사업을 주최해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3. 금번 KIN에서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해외 6개국의 저명한 동포학자들을 초청하여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을 2002. 11. 23~25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본 행사에 참가하여 발제를 하는 아래 1인에 대해 한국 출입국을 허하여 주시어, 본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성명	직위	소속
양옥금	교수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학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 배 덕 호 (직인)



- 문서번호 : KIN2002-KIS추진위-1118-01
- 수 신 : 재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
- 참 조 : 기획홍보실 이인우 과장
- 발 신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담당자: 권준희 연락 017-284-9860 이메일 rosLux@hanmail.net)
- 제 목 :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홍보 요청
- 일 시 : 2002. 11. 18.(월) (총 3 page)

보 도 자 료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1. 재외동포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2.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소속 KIS 추진위원회는 2002년 11월 23~25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에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아래 KIS)을 개최합니다.
3. KIS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이상 6개국 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를 초청해,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 및 재외동포 정책을 듣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들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대상이자,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 재외동포 정책은 각국 재외동포 정책과의 비교 속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KIS는 각국 소수민족 정책, 한국 재외동포 정책, 각국 재외동포 정책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4. 이번 KIS에서는 국내 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들도 참가해, 각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발제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해, 참가자들의 의지를 분명히 모아낼 계획입니다.
5. 화교, 이주노동자 등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 특히 배타적인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재외동포들

이 거주국에서는 소수민족,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재외동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6. 이에 귀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 < 아 래 > -----

◎ KIS 행사개요

- ◇ 일시 : 2002년 11월 23일(토)~25일(월)
- ◇ 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
- ◇ 주최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 ◇ 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재외동포재단, 성공회대 NGO 학과

◇ 세부일정

	11월 23일(토)	11월 24일(일)	11월 25일(월)
11시		<제2마당> 독일-일본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제5마당> 한국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12시		점심식사	점심식사
1시			<달는 마당> 선언문 채택
2시		제3마당 미국-브라질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3시			
4시		<제4마당>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종합토론	
5시	<여는 마당> 참가자인사/KIN·KIS소개 문화공연		
6시	저녁식사	저녁식사	
7시			
8시	<제1마당> 러시아-중국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선언문 초안 검토	

◎ 각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발표자 및 토론자

- ◇ 러시아
발표자 : 최이나(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한국문학 전임강사)
토론자 : 유의정(한국외대 외국학종합센터 러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 중국
발표자 : 양옥금(연변대 민족학 교수)
토론자 : 김화선(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 독일
발표자 : 신호진(베를린대 음악대학원생), 최영숙(한독문화협회 회장)
토론자 : 남상희(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 ◇ 일본
발표자 : 송승재(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토론자 : 조경희(동경대 사회정보연구소 박사과정)
- ◇ 미국
발표자 : 김대영(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토론자 : 박준규(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 ◇ 브라질
발표자 : 김범진(브라질 한인회 부회장)
토론자 : 최금좌(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끝>



- 문서번호 : KIN2002-KIS추진위-1119-01
- 수 신 : 각 언론사
- 참 조 : 사회부(재외동포 담당) 기자
- 발 신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담당자: 권준희 연락 017-284-9860 이메일 rosalux@hanmail.net)
- 제 목 :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홍보 요청
- 일 시 : 2002. 11. 19.(월) (총 3 page)

보 도 자 료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2.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소속 KIS 추진위원회는 2002년 11월 23~25일 성 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에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아래 KIS)을 개최합니다.
3. KIS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이상 6개국 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를 초청 해,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 및 재외동포 정책을 듣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들은 한국 재외동포 정 책의 대상이자,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 재외동포 정책은 각국 재외 동포 정책과의 비교 속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KIS는 각국 소수민족 정책, 한국 재외동포 정책, 각국 재외동포 정책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국 재외동 포 사회의 과제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4. 이번 KIS에서는 국내 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들도 참가해, 각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 책에 관한 발제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해, 참가자들의 의지를 분명히 모아낼 계획입니다.
5. 화교, 이주노동자 등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 특히 배타적인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재외동포들

이 거주국에서는 소수민족,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재 외동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6. 이에 귀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KIN (지구촌 동 포 청 년 연 대) 직 인 생 략

----- < 아 래 > -----

◎ KIS 행사개요

- ◇ 일시 : 2002년 11월 23일(토)~25일(월)
- ◇ 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
- ◇ 주최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 ◇ 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재외동포재단, 성공회대 NGO 학과

◇ 세부일정

	11월 23일(토)	11월 24일(일)	11월 25일(월)
11시		<제2마당> 독일-일본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제5마당> 한국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12시		점심식사	점심식사
1시			<달는 마당> 선언문 채택
2시		제3마당 미국-브라질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3시			
4시		<제4마당>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종합토론	
5시	<여는 마당> 참가자인사/KIN·KIS소개 문화공연		
6시	저녁식사	저녁식사	
7시			
8시	<제1마당> 러시아-중국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선언문 초안 검토	

◎ 각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발표자 및 토론자

◇ 러시아

발표자 : 최이나(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한국문학 전임강사)
토론자 : 유의정(한국의대 외국학종합센터 러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중국

발표자 : 양옥금(연변대 민족학 교수)
토론자 : 김화선(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독일

발표자 : 신호진(베를린대 음악대학원생), 최영숙(한독문화협회 회장)
토론자 : 남상희(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 일본

발표자 : 송승재(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토론자 : 조경희(동경대 사회정보연구소 박사과정)

◇ 미국

발표자 : 김대영(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토론자 : 박준규(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 브라질

발표자 : 김범진(브라질 한인회 부회장)
토론자 : 최금좌(한국의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끝>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110-07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90-16 1층 Tel. (02)706-5880 Fax. (02)706-5001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 문서번호 : KIN2002-KIS추진위-1126-01
- 수 신 : 각 언론사
- 참 조 : 사회부(재외동포 담당) 기자
- 발 신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담당자: 권준희 연락 017-284-9860 이메일 rosalex@hanmail.net)
- 제 목 :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 보도 요청
- 일 시 : 2002. 11. 26.(화) (총 6 page)

보 도 자 료

6개국 재외동포 한국 정부에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 제언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2.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소속 KIS 추진위원회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이상 6개국 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를 초청, 2002년 11월 23~25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에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아래 KIS)을 개최했습니다.
3. KIS는 재외동포의 문제를 모국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주국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각국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재외동포 정책을 고찰했습니다. KIS 참가자 모두는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적극 지원하되, 국내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평등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재외동포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국내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등 포괄적인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4. 참가자들은 KIS가 끝나고 각국의 재외동포 문제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으며, 2004년 6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제2차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을 열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6. 이에 귀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직인생략

----- <아래> -----

<참고자료 1>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

-- 6개국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담아 --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에서 소수민족(민족적 소수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조선 재외동포들과 함께 2002년 11월 23~25일 한국 서울에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을 열었다.

우리는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재외동포가 서로 다른 소수민족 혹은 이민 정책에 따라 상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노동자, 미등록(불법)노동자 등 다양한 법적 지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재외동포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공히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특히 각국 소수민족·이민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 그리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서로 비교하며,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1> 재외동포는 한/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동포 190만, 러시아 등 CIS동포 52만, 일본동포(조선적 포함) 120만 명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국동포 210만, 캐나다동포 14만, 브라질동포 5만, 호주동포 5만, 독일동포 3만 명 등도 해당된다.

한국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 재외동포는 내국민에 준해 대우되어야 하며, 외국인(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내국민과 동등해져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모두 내국민과 평등해지면서, 서로의 권리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이것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당연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적극 지원하되, 국내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 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 업무를 일관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개정돼야 한다. 또 재외동포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재외동포 단체나 민간단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의 국내 참정권은 당장 보장돼야 한다.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에게는 (본인이 희망할 때) 국적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 망명자 등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는 조건없는 입국이 보장돼야 한다. 재외 한국학 강좌의 개설, 한국문화원 등의 건립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2만 화교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가슴아파한다. 재외동포들이 한/조선 반도를 떠나 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배제와 차별 문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화교들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다.

화교는 물론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구성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훌륭하게 성

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영주자격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등록(불법)노동자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특히 개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및 인신적 모욕 등의 인권침해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한국의 국적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국적부여 방식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속지주의를 결합한 형태다. 한 나라가 국적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 되었다. 하지만 이주·이민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된 오늘날, 국적이 다른 혈통에 대해 배타적인 '혈통주의적 국적부여 방식'은 인권보장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속지주의적 국적부여 방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요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국내 화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 끝으로 우리는 이번 심포지엄이 6개국 재외동포에 의해 한국어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거주국의 언어'에 의해 습득된 경험은, 전세계 소수민족으로서 한/조선 민족이 주목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어로 진행되는 국제행사가 더욱 많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각국 재외동포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2002년 11월 25일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2>

◎ KIS 행사개요

- ◇ 일시 : 2002년 11월 23일(토)~25일(월)
- ◇ 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
- ◇ 주최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 ◇ 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재외동포재단, 성공회대 NGO 학과

◇ 세부일정

	11월 23일(토)	11월 24일(일)	11월 25일(월)
11시		<제2마당> 독일-일본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제5마당> 한국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12시		점심식사	점심식사
1시			<닫는 마당> 선언문 채택
2시		제3마당 미국-브라질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3시			
4시		<제4마당>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종합토론	
5시	<여는 마당> 참가자인사/KIN·KIS소개 문화공연		
6시	저녁식사	저녁식사	
7시			
8시	<제1마당> 러시아-중국 소수민족·재외동포 정책	선언문 초안 검토	

<참고자료 3>

◎ 각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발표자 및 토론자

- ◇ 러시아
발표자 : 최인나(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한국문학 전임강사)
토론자 : 유의정(한국외대 외국학종합센터 러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중국

발표자 : 양옥금(연변대 민족학 교수)
토론자 : 김화선(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독일

발표자 : 신호진(베를린대 음악대학원생), 최영숙(한독문화협회 회장)
토론자 : 남상희(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 일본

발표자 : 송승재(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토론자 : 조경희(동경대 사회정보연구소 박사과정)

◇ 미국

발표자 : 김대영(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토론자 : 박준규(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 브라질

발표자 : 김범진(브라질 한인회 부회장)
토론자 : 최금좌(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끝>

<오마이뉴스 생활광고 문안 1>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 참여자 모집’

- ◎ 재외동포들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
- ◎ 재외동포 문제를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
- ◎ 진보적인 재외동포 청년들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분
- ◎ 한민족 중심의 폐쇄적 공동체를 넘어 열린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에 관한 6차례의 공개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미, 독일, 미국, 일본, 중국, CIS(구소련) 등 6개 지역 재외동포들의 이주사를 정리하고 각국 소수민족 정책 및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기본발제를 듣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에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한편, 공개세미나의 성과를 이어, 오는 11월 23~25일에는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KIS)」을 개최합니다. KIS에서는 앞서 밝힌 6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를 직접 한국에 초청해 그들의 역사와 동포 사회의 문제점을 함께 토론합니다. 더 나아가 소수민족의 시각에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고찰합니다.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

◇ 상반기 3차례 : 재외동포 이주사 및 각국 소수민족 정책을 중심으로

□ 5월 25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남미 - 최금좌(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상파울루 주립대 박사)
- 미국 -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 철학박사)

□ 6월 1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독일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베를린 자유대학 석사)
- 중국 - 이진영(경희대 교수)

□ 6월 8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일본 - 이준식(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 CIS - 노영돈(인천대 교수)

⇒ 6월 22일(토) KIS 준비 제1차 워크샵 - 국내 소수민족 시각에 선 발상법을 위하여

◇ 하반기 3차례 : 각국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을 중심으로

□ 일정 - 8월 3일, 8월 24일, 9월 7일 □ 발제자 - 미정

⇒ 9월 28일(토) KIS 준비 제2차 워크샵 - 국내 해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주최: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문의: 02-735-4327, kin@kin.or.kr, 배덕호(016-402-4327)

△모집기간: 2002년 5월 10일까지 △참가비: 6차례 5만원, 3차례 3만원

<오마이뉴스 생활광고 문안 2>

워크샵 '한국사회 소수민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일시: 10월 19일 토요일 낮 4~6시

장소: 참여연대 강당

주최: KIN 산하 「KIS 추진위원회」

발제: "소수민족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이종훈(국회정치담당 연구관, 정치학박사)

토론: 박천웅(안산외국인 노동자의 집)

독고순(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양필승(건국대 교수, 엠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 위원장)

참여문의: 017-284-9860(준회)

<목적>

화교,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과 운동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소수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한국사회 소수민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한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 워크샵이 소수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경>

KIN은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는 재외동포교류단체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 한국방문 프로그램 및 재미동포 한국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KIN은 오는 11월 국외 6개국(일본,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브라질)의 재외동포 활동가 혹은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이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국외 6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소수민족정책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동시에 국내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수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하여, 화교, 이주노동자, 탈북자 관련 활동가 혹은 연구자들을 모셔서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심포지움] 각국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 비교검토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가 꾸준히 준비해 온 심포지움이 11월 23-25일 성공회대학에서 개최됩니다.

이 심포지움은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의 재외동포들을 초청하여 각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각 발제에 대하여 한국사회 내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내용들이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한국사회 소수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심포지움이 생산적인 토론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행사 개요 ----

1. 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4층 7417호(지하철 온수역에서 도보로 7분)

2. 세부일정 : 11월 23일(토) 낮4시-11월 25일(월) 낮2시

23일(토)

<여는마당> 낮 4- 6시 : 참가자 인사, KIN 및 KIS 소개, 문화공연

<저녁> 저녁 6- 7시

<제 1마당> 저녁 7- 9시 : 러시아-중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비교

24일(일)

<제 2마당> 아침 10-12시 : 일본-독일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비교

<점심> 낮 12- 1시

<제 3마당> 낮 1- 3시 : 미국-브라질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비교

<제 4마당> 낮 3시30분 :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종합토론

<저녁> 저녁 6- 7시

25일(월)

<제 5마당> 아침 10-12시 : 한국정부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점심> 낮 12- 1시

<닫는마당> 낮 1- 2시 : 선언문 채택

3. 발제자

<러시아> 최인나, 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한국문학 전임강사

<중국> 양옥금, 연변대 민족학 교수

<일본> 송승재,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독일> 신호진, 베를린대 음악대학원생/ 최영숙, 한독문화협회 회장

<미국> 김대영,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브라질> 김범진, 한인회 부회장

4. 참가신청

신청기간: 11월 20일까지 (당일신청 가능)

참기비 : 전체참가는 2만원, 부분참가는 1만5천원 (자료집, 식사)

연락처 : 017-284-9860, 011-496-1947, rosalex@daum.net

5. 주최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성공회대학교 NGO 학과

<신문 기사>

<연합뉴스 2002년 11월 22일>

지구촌동포청년연대,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도희 기자 =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사무국장 배덕호)가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 검토해 바람직한 동포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23일 오후 4시 성공회대학 새천년관에서 개최한다.

25일까지 계속되는 이 심포지엄은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의 재외동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듣고 국내 관련 연구자와의 합동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날인 23일에는 양옥금 중국 연변대 민족학 교수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화교정책'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이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한국문학 전임강사가 거주국 동포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24일에는 송승재 일본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최영숙 독일 한독문화협회 회장, 김대영 미국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김범진 브라질 한인회 부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발제자의 발표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이며 마지막날인 25일에는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께 선언문을 채택한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5일>

“재외동포법 개정, 재외 한인 적극 포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희 기자 = 송승재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25일 "현행 재외동포법 제2조2항의 외국국적동포 규정에서 제외된 재일동포 중의 '조선표시(조선적)' 보유자가 국회에서 검토될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제외된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가 지난 23일 서울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의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재외동포 정책 관련 폐막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적 보유자는 1947년 당시 일본 국내에 존재한 모든 재일 한인에게 부여된 '조선'이라고 하는 일본 외국인등록법상의 '기호'를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손"이라며 "대부분 고향이 남한인 이들은 안보 문제와도 무관한 무국적자일 뿐이다"고 분석했다.

독일 베를린대 음악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효진씨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갖지 못한 동포는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국적 취득을 보장하는 게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추세"라며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등지에 거주하는 무국적 동포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만7천여명에 이르는 지린(吉林)성의 귀국 화교들에게 주 정부가 주택을 지어주고 취업문제도 적극 해결하는 등 우대정책을 쓰는 것을 예로 든 양옥금 중국 연변대 민족학 교수는 "혈통주의, 이중국적 등은 중국 정부도 허용 않을 것이고, 조선족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중국처럼 우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출입국과 노동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미국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는 "역사적 인과를 고려하여 중국, 일본, CIS 등 재외 한인에게는 특별한 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등 이들을 적극 포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노동력 필요성과 중국 조선족의 경제적 목적을 고려해보면 취업권이나 영주권 등이 좋은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2002년 12월 2일>

■ 재외동포 정책 토론회 ■

“재외동포 처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공회대에서는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가 마련한 뜻깊은 행사가 하나 열렸다.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정책 국제심포지엄'으로 명명된 이날 행사는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동포 정책을 비교하면서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가는 자리였다.

이날 참가자들이 제시한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원칙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였다. 즉 재외동포들이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고통받고, 해당 국가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차별받는 이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외동포의 개념으로 '한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도 주장했다.

이런 요구사항은 각국 동포들이 놓인 현실 속에서 자연스레 불거져 나왔다. 양옥금 중국 연변대 민족연구원 교수는 2000년 하반기에 중국 동북3성의 9개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한국 출국상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50%가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이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한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친척과 지내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성격 등 심각한 자녀교육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중 한 명이 출국하면 7·8년이 걸리는 탓에 조선족의 이혼율이 중국 내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양 교수는 “조선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 제한적인 영주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화교나 소수민족에게 본국 국민보다 우대정책을 하듯 한국 정부도 조선족에 대해 자유통계 모국을 드나들고 한국인과 동등하게 노동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다.

일본 상황을 설명한 송승재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이른바 ‘조선 표시’ 보유자,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는 이들을 재외동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이른바 ‘안보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남쪽을 고향으로 둔 이들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그런 생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최영숙 한독문화협회 회장과 신효진 사물놀이패 <천둥소리> 공동창립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국학과와 훔볼트대학의 한국학 강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김대영 메릴랜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독일은 동유럽에 있는 독일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인들을 위해 시민권 개념을 폭넓게 고쳤다”며 “한국 정부는 한민족의 자유로운 한국 출·입국을 허용하는 특별한 비자 종류를 마련하는 한편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는 취업권이나 영주권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또 “한국 사회에서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2만 화교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가슴아파한다”며 “영주자격을 보다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기철 기자

<인권하루소식 2002년 12월 4일>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한민족’이라는 자민족 중심의 사고를 넘어 거주국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는 행사가 있었다. 지난달 23~25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에서는 재외동포 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주최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코리안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6개국 재외동포들은 이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직접 비교·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정부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재외동포는 한/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라며, 재외동포의 정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소련지역 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어 “한국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제시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당연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적극 지원하되 △국내 입국 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하고,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이 재외동포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재외동포들이 한/조선 반도를 떠나 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배제와 차별 문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며,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2만 화교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가슴아프다”라고 밝혔다.

선언문에 따르면, 화교는 물론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구성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주자격은 보다 확대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재외동포는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하며, 외국인(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내국민과 동등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모두 내국민과 평등해지면서, 서로의 권리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전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외동포와 국내 화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6개국 재외동포들이 직접 만나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토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04년 6월 러시아에서 두 번째 학술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범용]

<한겨레신문 2002년 12월 9일>

[인권이야기] ‘일제인’ 정도 돼야 국제표준

한국의 재외동포처럼 일본에는 ‘일제인’이란 말이 있다. 일본인 혈통을 가지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일본사회에서 자유로운 노동을 허용하고 있어, 전문직 또는 연수생 자격만 부여하는 외국인과의 비교해 분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우대조치는 일본사회 내 다른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아

닐까

지난달 23~25일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주최로 열린 '코리안 국제 학술대회'에서 나는 그 답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일조선인 송승재 씨(제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일제인의 인권은 더욱 향상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일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는 더욱 보완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눈을 돌려 한국사회를 보자. 국내 이주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중국동포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들에게 국내 취업의 문호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자,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차별 문제는 재외동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 비교할 문제다. 그리고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 또한 여전히 미흡할 따름이다.

사실 재외동포와 이주노동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로부터 이주해 온 집단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출신국의 재외동포에 다름 아니다. 이들 모두가 한국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와 차별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와 이주노동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서로의 인권신장을 위해 함께 싸워 나아가야 할 집단인 것이다.

일제인에 대해 일본정부가 취한 조치를 일본사회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바라보지 않는 송승재씨의 입장은 재외동포와 이주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동북아신문 2002년 12월 9일>

‘인권의 시각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심포지엄, 소수민족으로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며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일간 성공회대학교에서 '해외소수민족 및 이주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러시아, 중국, 미국, 브라질 등 해외 6개국 재외동포들이 함께 한 이 자리는 각국의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재외동포 정책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국제한민족심포지엄, 이하 KIS)추진위원회는 이 자리가 통하여 '한민족'이라는 혈통적 네트워크를 넘어 서로 다른 국가의 소수민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네트워크로 자리 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연변대 양옥금 교수는 중국의 화교권익보호법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는 중국동포들에게 인간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재중동포의 동등한 재외동포 권리를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의 불법체류 정책에 대해 단속과 추방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정상적인 노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외동포 문제에서 등한시되었던 '조선표시(조선적)' 보유자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제일한국청년연합 송승재 공동대표는 재검토 될 재외동포법도 재외동포 중 '조선표시'보유자를 배제하는 안이라며 조선표시 보유자도 재외동포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자신의 할머니도 조선표시 보유자라며 '한국정부가 이들의 안보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예상되지만 현재의 상태를 생각할 때 그러한 생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혈통주의와 속지주의에 대한 국적취득 논의도 있었다. 독일 베를린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신효진씨는 '오늘날의 엄청난 이주 현상을 볼 때 순수한 혈통, 핏줄에 의한 국적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제한한다'며 '속지주의 원칙을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국내 외국인의 일반적 법적 지위개선을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25일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한국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재외동포는 내국인에 준해 대우되어야하고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들이 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배제와 차별 문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최현영 기자

<교수신문 2002년 12월 12일>

각국 동포들이 제안한 재외 동포 사회의 과제

“언어·문화·교육 부문 정책적 지원 절실하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성공회대에서는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심포지엄'을 주제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브라질, 독일의 재외동포들이 모여 각국의 동포 사회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서툴지만 고국에서 모국어로 토론한다는 사실에 다들 상기된 모습이였다.

먼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조선족 동포 문제에 대해 양옥금 중국 연변대 교수(민족학과)가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조선족들은 중국 정부의 공정한 정책 덕에 한족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권리를 누리며堂堂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조국'의 정부가 오히려 이들을 차별하고, 국민들이 죄인취급 해 조선족들은 현재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2000년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가정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반면 중국은 해외교포가 중국의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주요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해 화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양 교수는 최소한 조선족 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 한국민과 대등한 노동권·보수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안이한 재외동포 관리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송승재 제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한국 정부를 비교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출입국과 노동 활동 면에서 일본 거주자와 거의 대등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00년 해외이주 심의회 제74회 총회에서는 '해외일본인은 거주국과 일본의 가교', '해외일본인의 활약은 일본에게 무형의 재산'이라는 이념을 공고히 했다. '리더층 육성, 일본어 교육 강화, 일본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일본인 마을 부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일본 내 외국인들에게 냉담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와 지극히 대조적이라고 송 대표는 전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일본의 정책이 국익에 맞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구분하는 '포섭과 배제'의 위험한 발상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재외 동포들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고 토로했다. 신효진 베를린대 음악대학원생은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여권 발급 외에 재독 한국인을 위해 하는 일이 있거나 한지 묻고 싶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와 문화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이 전무한 점"이라고 비판했다. 재외 동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동포 사회의 활성화 조건을 제시한 최인나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교수(한국문화과)도 "공식 사이트 마련, 단일 정보 채널 확정, 정기 회보 발간, 한인사회에 대한 자료 축적 등이 시급하며,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후원과 단체 및 기업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한국 활동가, 학자 및 예술가 등의 초청강연이나 정기 세미나 등 문화행사, 그리고 구세대 한인들의 고립감을 막기 위한 여가 선용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범진 브라질 한인회 부회장은 "1992년에 건립된 상파울로의 한인학교가 정규 학생 3백 20명, 언어학교 학생 5백명 규모의 기관으로 성장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한인 대학생 협회 주관 '하나'라는 행사에 해마다 중남미 각국 학생들이 모여든다"며 한국 정부가 교육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교류를 늘려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브라질인들이 해외에서 브라질 선거에 투표하는 것과 달리 브라질의 한인 이민자들은 아무런 정치적 권리가 없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1972년 선거법 개정 당시 박정희 정권이 해외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해외 부재자투표를 폐지해, 현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해외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국내외적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차별 속에서 한국국적을 지켜온 재일동포들이 1997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대영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사회학과)는 9·11사태 이후 미국에서 비자 초과 체류 같은 경미한 범죄에조차 추방조치를 내리는 가혹한 이민법이 강요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은 한민족은 물론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망명자들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 보호와 의료보험을 실시해야 하며 노동자 학대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추방 위험은 이민 정책을 개정해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정책은 한국의 평판을 나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권리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무시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설유정 기자

<행사 사진>



(그림 1) 2002.10.19 제2차 워크숍



(그림 2) 2002.11.23 KIS 여는 마당



(그림 3) 2002.11.23. KIS 제1마당



(그림 4) 2002.11.24. KIS 제2마당



(그림 5) 2002.11.24. KIS 제3마당



(그림 6) 2002.11.24. KIS 제4마당



(그림 7) 2002.11.24. KIS 종합토론



(그림 8) 2002.11.24. KIS 종합토론



(그림 9) 2002.11.25. KIS 제5마당



(그림 10) 2002.11.25. KIS 뒷풀이

<제4부>

KIS 평가서 모음

- KIS 추진위원회 전체 평가서
- KIS 의제 개발팀 평가서
- KIS 행사실무팀 평가서
- KIS 해외네틱팀 평가서
- "우연을 통해 맺은 인연" (러시아 최인나씨 소감)

KIS 추진위원회 전체 평가서

권 준 희 (KIS 추진위원회 책임자)

1. 기획배경

한국의 재외동포는 58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무관심함.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며, 때로는 재외동포에 대한 과도한 민족주의로 대응하다가도 무관심해짐. 또한 국내 이주노동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관심 제기됨.

2. KIS 목적

- 1)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이주역사 및 현황을 개괄하고,
- 2) 6개 지역을 선정해 각국의 소수민족 및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 3)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 4)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를 선정하고,
- 5) 이를 통해 한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해 역지사지의 시각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함

2-1. KIS 목적에 대한 평가

1), 2), 3)은 KIS에서 달성되었으나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를 선정하지 못했음. 본 행사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는데에는 역부족이었음. 하지만 목적 5)에서 제시되었던 재외동포의 고려와 함께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과 시각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한국/조선의 혈통이나 국적을 가진 이와 그 후손들”이라는 대안적인 “재외동포” 개념을 합의를 통하여 도출함.

3. 의제개발

3-1. 의제1 : 재외동포의 이주역사와 현황

- ① 해외이주 당시 국내 및 이주국의 상황(이주의 원인)
- ② 해외이주 후 정착과정(재외동포 사회의 역사)
- ③ 거주국 내 재외동포들의 위치(재외동포의 현황 및 과제)

의제1에 대한 평가 : 이 부분은 애초 KIS 추진위의 내부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학습하고자 하였으나 1차 세미나를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6개국의 이주사를 3회에 걸쳐 검토하였음. 재외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압축적인 양질의 강의가 진행되었음.

3-2. 의제2 : 해외 6개국의 소수민족(장기체류 외국인) 정책

- ① 소수민족 현황 및 소수민족 관련법 유무
- ② 이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관행들 및 각종 인권보호와 우대조치
- ③ 외국인의 국적취득 조건과 절차 및 취업·사회보장 제도
- ④ 재외동포 사회의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의제2에 대한 평가 : KIS 본행사에서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검토되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이 부분을 검토하다보면 논점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소수민족 정책만 주력함. 각국의 민족적 상황이 상이한 상태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을 소수민족에 포함하는 것이 애매했음.

3-3. 의제3 : 해외 6개국의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

- ① 재외동포 현황 및 재외동포 관련법 유무
- ②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여부 및 국내 출입국 문제
- ③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의제3에 대한 평가 : 발제문 요구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 발제의 형식이 일관되지 않았음. 이민의 나라 미국, 브라질의 경우 재외동포정책이 아예 부재했으며, 일본의 일제인에 대한 정책 역시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발제문을 일괄적으로 요구했음.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은 발제문에 포함되지 않았음(발제문에 대한 내용파악이 되지 못하여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었음). 하지만, 독일과 특히 중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비교적 잘 검토됨.

3-4. 의제4 :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 ①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개괄
- ② 재외동포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 ③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

의제4에 대한 평가 :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정리는 잘되었음.

3-5. 의제개발에 대한 전체 평가

소수민족 및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이론이 척박한 상태에서 발전적인 개념을 도출할 내부적인 역량이 부족했음.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갔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론적 보충과 정책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KIN의 이론적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4. 세부행사 기획원칙

- ① KIS 행사의 성과는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렴돼야 함
- ②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논의 뿐만 아니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③ KIS 행사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청발제자들의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도우미를 1명 이상씩 모집함
- ④ 논의·토론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교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⑤ KIS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함

4-1. 세무행사 기획에 대한 평가

1. 공동 선언문 작성을 통하여,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과제는 재외동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자유로운 입국과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2. 본 행사가 시간이 쫓기면서 진행되어 '친목'을 도모할 시간은 부족. 하지만 행사를 완전

히 마친후 식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가능성 확인함. 2회 KIS행사를 러시아 페체스부르크에서 개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KIS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해짐.

3. 한국어를 원칙적으로 사용했으며, 발제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통역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지만 브라질과 독일측 참가자들은 한국어 토론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함. 이에 대하여 각국어의 통역자를 1인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4. KIS 행사의 자원활동가 모집은 실패: 공개 세미나 과정에서 관심있는 참여자 모집에 실패함으로써 KIS 행사는 내부 진행요원들을 중심으로만 진행됨. 홍보의 방법은 적절하였으나 국내 연구자 및 활동가들에게 이 사업을 알리는 데에는 실패함.

5. KIS본행사기획

- ① KIS 행사는 11월 중 2박 3일간(토~월) 진행함
- ② 「의제1」은 주최측에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간단명료하게 발표함
- ③ 「의제2」와 「의제3」은 해외 2개국씩 짝을 지어 비교·검토함. 이때 '러시아-중국', '미국-브라질', '독일-일본'이 각각 짝이 됨
- ④ 「의제4」와 관련해서는, 주최측 기초발제가 있고 이후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가 기초 발제에 대한 논평 및 요구사항을 밝힘
- ⑤ KIS 행사는 참가자들이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마무리됨

5-1. 본행사 세부일정에 대한 평가

1. KIS 행사는 예정된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음
2. 이주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KIS 본행사에서 다루지 않았음. 발제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짐.
3. 발제의 일관성 : 각국의 발제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음.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애초 요구했던 발제문과는 매우 다른 발제문이 수거됨. 이는 해외네트워크팀과 발제자들간의 소통의 문제로도 제기될 수 있으나, 의제개발팀에서 다국어로 된 발제를 미리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 또한 발제문 요구안이 너무 늦게 제출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발제문 요구일자가 늦어짐. 따라서 행사당일 전까지 자료집 편집에만 매달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반드시 발제문 수거 일정을 넉넉히 두고 피드백과 수정작업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내 번역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도 있음.

4. 토론의 진행방식 : 시간에 쫓기면서 토론을 진행. 각국의 토론자와 발제자가 1시간내에 발표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음.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발제자들의 한국말이 서툰 것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발제시간을 너무 부족하게 잡음. 6개국 검토가 무리였음. 결과적으로 전체토론이 부실하게 진행되었으며, 토론을 통하여 논쟁적인 문제들이 도출되지 못함. 사회자의 조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토론내용과 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6. 일정

- ① 3월 23일 -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 ② 4월 중 - 6개국 초청발제자 섭외
- ③ 6월 22일 - 1차 워크샵 (재외동포 이주역사와 한국 재외동포 정책)
- ④ 9월 28일 - 2차 워크샵 (국내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 ⑤ 11월 중 -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6-1. 일정조정에 대한 평가

1차 세미나 이후 KIS 내부역량 부족에 대한 자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해체위기. 이로 인하여 1차 워크샵 무산. 8월,9월 동안 내부세미나 진행을 통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한후 9월 28일 1차 워크샵 진행함. 재외동포재단의 관련자를 초청함으로써 진행됨. "소수민족기본법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2차 워크샵은 공개적으로 진행됨. 워크샵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소수민족' 개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음.

7. KIS의 재정원칙

- ①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들은 최소4박5일간 국내 체류하게 됨 (행사시작 전날부터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이때 국내체류비(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와 왕복항공료를 지원받게 됨
- ②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 항공료는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전액 지출함
- ③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는 국내체류비는 홈스테이를 통해 일부 해결하고 일부는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지출함
- ④ 추진위 발족식 및 2차례의 워크샵 경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적자액은 KIN

에서 지원함

- ① KIS 본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지출하고 백서 제작시 인쇄비는 KIN에서 지원함

7-1. 재정에 대한 평가

재외동포 초청 왕복비행기값이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게 되면서 KIS 행사에 대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경감하였음. 전반적으로 큰 낭비없이 재정지출이 이루어졌으며, 행사참가비, 후원비 등을 포함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룸.

KIS 의제개발팀 평가서

이 선 옥 (KIS 추진위원회 의제개발팀)

의제개발팀 평가 영역

· 의제개발/ · 의제 내용/ · 본 행사시 발제와 의제의 부합성

1. 의제개발 과정

· 전체적으로 의제개발이 늦어져 각국의 발제문과 토론문을 행사준비측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재요청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는 KIS준비시 겪었던 전체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인력의 부족(4인이 중심으로 준비)에 기인했다. 특히 인력부족은 행사 자체를 그만둘 것인가의 논의와 직결되었었고, 행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의제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후 행사를 준비하는 팀에서는 행사준비 인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의제개발을 위해 여러 차례의 자체 학습과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했었다. 행사준비측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정책을 살펴봐야 했고,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애초 기대한 만큼의 세밀한 학습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의제를 개발함에 있어 배경지식을 제공했다.

· 의제개발은 준희와 이선옥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이선옥이 KIS 준비팀에 합류하게 된 시점이 늦어져 행사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것은 의제개발이 지연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 의제내용

- 본래 KIS 행사의 중요 기본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의 이주역사와 현황

- 국외 6개국의 소수민족 정책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
- 국외 6개국의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
-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따라서 각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세부의제의 중요한 내용이였다. KIS에서는 각국 소수민족 정책, 재외동포 정책에 관하여 각각의 세부의제를 개발하였다.

KIS의 목적은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이주역사 및 현황을 개괄하고, 국외 6개국의 소수민족 및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을 비교·검토하며,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였다. 의제는 이러한 KIS의 목적에 맞추어 개발되었고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의제 개발의 중심이 주로 동포이슈에 맞추어져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이나 권리의 문제는 비중이 적게 다루어 졌다. 이는 한번의 심포지엄에 모든 것을 담아 낼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심포지엄 준비과정에서 합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향후에는 재외동포 이슈에 못지 않게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의 확대 차원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본 행사시 발제와 의제의 부합성

· 본 행사시 각국에서 미리 준비하여 보내 준 발제문은 애초 KIS 추진위에서 준비한 세부의제와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물론 각국의 발제문 작성시 KIS의 기본 의제에 의거하여 발제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KIS 추진위에서 제공한 세부의제의 내용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 이것은 각국의 관심과 상황에 맞게 수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행사시 각국의 발표 내용이 조금씩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되어 그것에 대한 토론이 하나의 다른 발제가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발제문이 행사 준비팀에서 제안한 의제와 부합하는지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은 다시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총평

1.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의제개발을 하였다.

2. 준비과정에서 인력의 부족이 의제개발이 지연되는 데 문제가 되었다.
3.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이 행사의 목적과 의도에 대하여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의제 개발에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4. 의제개발을 위한 학습과 세미나는 구성원들이 배경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 이번 심포지엄의 의제들은 적절했으며, 향후에는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6.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준비팀에서 제공한 의제에 맞게 발제문을 준비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측에서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KIS 행사실무팀 평가서

'범 용' 이 (KIS 추진위원회 행사실무팀)

행사실무팀 평가 영역

- 재정/ • 홍보/ • 자원활동가 • 통역도우미 모집
- 장소섭외, 세부행사 기획 등 KIS 본행사 준비 • 진행

□ 재정

- 시민운동지원기금의 800만원 지원금으로 KIS 행사 추진함
- KIS 행사 직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600만원 지원받음
- 재외동포 초청자 왕복항공료 및 식비 · 교통비, KIS 행사 홍보비, 발제문 번역비, 사물놀이패 섭외 등 행사진행비, 자료집 제작비 등은 지원기금의 지원금으로 지출
 - 재외동포 초청자들에게 민박을 제공함으로써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음
 - 한국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재외동포들을 발제자로 초청함으로써 통역과 관련된 별도의 재정지출은 없었음
- 장소대여비, 자료집 제작비, 백서 제작비 등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지출
- KIS 추진과정에서 진행했던 세미나, 워크샵 등은 행사참가비, 후원비 등으로 지출
 - 애초 지출될 예정이었던 강사비는 강사들의 양해로 지출되지 않음
 - 행사도 KIN 사무실에서 하거나 장소제공 단체의 양해 속에 장소비 지출이 축소됨
- 그러나 향후 행사규모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강사료는 1인당 10만원, 장소대여비도 10만원으로 책정해 재정보고를 함
- 총수입 16,684,930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 8,000,000원
 - 재외동포재단 : 6,000,000원
 - 행사참가비, 후원비 등 : 2,684,930원
- 총지출 16,684,930원
 - 기획비 : 267,700원

- KIS 추진위 발족식 : 236,200원
- 상반기 공개세미나 : 828,700원
- 제1차 워크샵 : 168,200원
- 제2차 워크샵 : 588,400원
- KIS 본행사 : 11,595,730원
- 비디오 및 백서 제작 : 3,000,000원

□ 홍보 및 참가자 조직 정도

- KIS 행사 홍보는 오마이뉴스 생활광고, 팸플릿·포스터 발송,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게시판에 행사안내문 등록, 성공회대 내 포스터·현수막 부착, KIN 회원들에게 전화통화, 보도자료 배포, 재외동포재단 행사공지 등으로 이루어짐
- 상반기 공개세미나, 2차례의 워크샵 등 KIS 추진과정의 행사도 간접 홍보효과를 거둠
- 홍보활동은 전반적으로 큰 잘못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KIS 행사 당시 참가자는 연인원 30명 정도
 - 발제자·토론자, KIN 회원,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 시민 등
- 한국사회 내 재외동포들에 대한 무관심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자 조직화는 실패
- KIS 행사의 특징을 부각시켜, 보다 적극적인 대인홍보가 부족했음
 - 이는 KIS 행사 직전까지 발제문 작성 및 자료집 제작에 시간이 쫓겨 KIS 행사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대인홍보 계획을 세우지 못함
 - 한편으로는 첫 행사인만큼 KIS 행사에 대한 자신감을 체화하지 못함

□ 자원활동가·통역도우미 모집

- 자원활동가 모집에 관한 애초 계획은 공개세미나와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자원활동가로 전화한다는 것
 - 그러나 공개세미나와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이 매우 적었으며
 - 참여한 사람들도 지속적이지 않아 자원활동을 제안할만한 사람이 없었음
- 또 KIS 행사규모가 크지 않았던 관계로, 별도의 자원활동가가 많이 필요 없었음
- 이상의 문제의식으로 자원활동가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음

- 다만 KIS 행사 때 참가자 접수를 위해 KIN 회원들에게 자원활동을 부탁했음
- 평가를 하면 참가자 접수, 행사진행 등을 위해 행사진행 요원이 최소 2명 정도는 필요
 - 이때 행사진행 요원은 KIS 행사 참가가 거의 어려운 행사보조 요원임
 - 따라서 KIS 행사에서 발제를 하는 사람이 행사진행 요원을 겸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음
- 통역도우미 모집에 대한 애초 문제의식은 한국어에 어느 정도 능숙한 재외동포들을 발제자로 초청해서 KIS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역도우미가 사실상 필요없도록 할 생각
 -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각국별로 통역도우미 1인을 섭외할 계획이었음
- 의제개발 및 행사실무에 쫓기다 보니 통역도우미 모집에 적극적일 수 없었음
 - 여기에 재외동포 초청대상자들이 한국어에 아주 능통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음
- 결과적으로 브라질 김범진 씨와 독일 신효진 씨는 통역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했음
 - 생활회화에 능숙한 것과 회의석상에서 토론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달랐음
- 앞으로 이 같은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 통역도우미를 섭외하는 것이 필수임
 - 다만 통역가능한 사람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임

□ KIS 본행사 준비·진행

- KIS 행사의 세부계획을 세우는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6개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검토한다는 문제가 만만치 않음
 - 여기에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했음
 - 발제시간과 토론시간, 선언문 작성 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이 관건
- 애초에는 소수민족 정책, 재외동포 정책 등 주제별로 마당을 진행하려 했음
 - 6개 나라가 한꺼번에 발제를 한다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2개 국가씩 묶어 나라별로 마당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그 다음 문제는 국가별 마당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것이었음
 - 한 국가의 발제가 끝나면 토론자가 토론을 하고, 다른 국가의 발제가 끝나면 토론자가 토론을 하고 이후 간단한 질문만 받고 국가별 마당은 끝내기로 함
 - 국가별 마당 이외에 종합토론 마당을 두어

- 이때 국가별 발제에 대한 의문들 대부분을 한꺼번에 토론하기로 함
- 한국정부 재외동포 정책은 KIS 추진위에서 준비하고
 - 각국 재외동포 초청자들이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를 이야기하며 토론을 하기로 함
 - 끝으로 여는 마당에서는 개막행사를 하고 닫는 마당에서는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함
 - 이에 맞는 행사장소로 성공회대학교 강의실이 추천됨
 - 원탁회의가 가능하도록 자리를 배치할 수 있고
 - 영상물 상영기기, 마이크 시설, 식당·뒷풀이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곳
 - 시내 중심은 아니었으나 1호선·7호선이 교차되어 교통이 원활함
 - 밤 9시 넘어서까지 행사진행이 가능함
 - 공교롭게도 참가자 대부분이 성공회대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숙박함
 - 행사장소도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적당했음
 - 행사장 미화, 회의진행 도구 준비, 차·음료수 구비, 영상물 상영 준비 등 행사진행과 관련된 일은 차질없이 이루어졌음
 - 여는 마당에 성공회대학교의 사물놀이 동아리를 섭외해 문화공연을 하고 김강수 씨가 제작한 KIN 홍보 비디오를 상영해 학술대회의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
 - 행사실무와 관련해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생인 이선옥 씨의 도움이 컸음
 - 국가별 마당은 권준희 씨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애초 배정됐던 2시간을 약 30분씩 초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토론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무리 시간이 상당히 늦어짐
 - 닫는마당이 1시간이었으나 선언문 검토작업이 치열해 2시간 동안 진행됨
 - 앞으로는 발제·토론마당 시간을 훨씬 여유있게 배분하든지 아니면 보다 단호한 사회진행이 필요함
 - 애초 KIS 행사 이후에는 별도의 뒷풀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
 - KIS 행사 중 친목을 도모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판단 아래 KIS 행사 이후 뒷풀이 계획으로 남산타워 전망대 관람, 충무로 민속마을 방문, 인사동에서 저녁 및 술자리를 갖기로 함
 - 재외동포 초청자 등에게 행사 첫날 뒷풀이 계획을 알리고 참가를 독려했으나 일부 재외동포 초청자는 선약을 잡아놓은 경우도 있었음
 - KIS 행사가 끝나고 실제 뒷풀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보다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제2차 KIS 행사를 2004년 6월 러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냄

- 앞으로는 뒷풀이 행사도 공식행사 일정에 넣어 참가자들이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뒷풀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 총평

- 행사실무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큰 문제없이 일정별로 무리없이 소화해 냄
- 행사 직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얻어 재정상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금만으로만 행사를 치루어 냈으면 큰 적자를 봤을 것임
- 무차별 홍보와 더불어 집중적인 대인홍보를 통해 참가자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음
- 자원활동가 모집에 실패함으로써 의제개발팀과 해외네트워크팀에 부담을 준 결과를 초래함
 - 앞으로는 2~3명의 행사실무 자원활동가를 행사 1개월 전에 모집할 필요가 있음
- 행사 세부계획을 가능한 빨리 세우는 것이 행사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KIS 행사의 경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사실무의 짜임새가 부족했음

KIS 해외네틱팀 평가서

김 영 희 (KIS 추진위원회 해외네틱팀)

1. 경과보고

- 3월 15일 일본 박진웅 국장 KIS 참여에 대해 자체 행사와 겹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신 음
- 3월 22일 미국 김대영씨, KIS 참여에 대해 수업 일정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참여 하겠다던 답신 음.
- 3월 23일 KIS추진위 발족식, <KIS 해외네틱팀 활동계획> 발표
- 4월 3일 한글파일 의사소통 가능여부 공지메일
독일(이회영), 일본(박진웅), 미국(김대영), 러시아(최종술)
- 4월 3일 일본(박진웅) 한글파일 수신가능 답신 받음. 일정 겹치지 않는다면 참여 하겠다던 답신도 포함됨.
- 4월 3일 미국 김대영씨 답신 음.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남미국 리서치 떠난다는 말과 함께 한글파일 수신이 가능하다는 답신.
- 4월 18일 이진영 교수에게 중국쪽 KIS참여자 섭외요청 이메일 보냄
- 4월 18일 이진영 교수 답신 음. 섭외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임.
- 5월 2일 이진영 교수에게 중국쪽 KIS참여자 섭외요청 이메일 다시 보냄
- 5월 5일 독일, 일본, 미국, 러시아 초청대상자에 KIS기획서(한글파일) 이메일 보냄
- 5월 6일 독일 이회영씨의 메일 답신 받음. 이메일링에 문제가 있으며 한글파일을 여는데 문제있었음.
- 5월 7일 독일 이회영씨에게 KIS기획서 재발송함
- 5월 7일 이진영 교수가 추천한, 중국측 KIS 초청 대상자인
연변대 민족역사연구소 소장 김춘선 교수에게 KIS기획서 발송함
- 5월 10일 중국 김춘선 교수에게서 KIS참여가 어렵다는 답신 메일 음.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발제의 부담감이 있었음)
- 5월 12일 이진영 교수에게 중국측 KIS 초청 대상자 재섭외 요청 메일 보냄

5월 13일 이진영 교수, 연변대 김강일 선생과 북경의 정신철 선생에게 KIS참여와 관련된 문의를 하겠다는 답신 음.

6월 3일 독일 이희영씨에게서 한글파일을 열 수 없다는 답신 음.
독일측 KIS 참여자가 신효진씨라는 내용도 보내음.

6월 4일 독일 이희영씨에게 KIS기획서 다시 이메일 전송함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답신 메일에 대해서)

6월 11일 최금좌 선생에게서 브라질 KIS 초청 대상자에 대한 메일을 답신함.
<중국어 시의원 William Woo의 보좌관인 Thomas Park(박상운)과 한인들
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Bruno(범진)씨를 추천함>

6월 15일 이진영 교수에게 중국측 KIS 초청대상자 추진상황 문의메일 보냄.

6월 15일 독일 이희영씨에게 KIS기획서 다시 파일 전송함.

6월 19일 브라질 Thomas Park(박상운)씨에게 KIN소개 및 KIS소개, KIS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이메일 전송함.

6월 19일 독일 이희영씨에게 독일 참여자 신상에 대한 문의 메일 보냄.

6월 19일 독일 이희영씨에게서 한글파일을 열 수 있었다는 답신과 함께 15세인
신효진씨가 참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음.

6월 19일 일본 곽진웅 국장에게 최종 참여 의사 확인 메일 보냄.

6월 19일 러시아 리나탈리아 선생 초청과 관련하여 최종술씨에 최종 확인메일 보냄.

6월 19일 러시아 나탈리아 선생에게 초청관련 최종 이메일을 보냈다는 최종술씨
이메일 받음.

6월 20일 브라질 Bruno(범진)씨에게 KIN소개 및 KIS행사 소개, KIS 참여 가능여부
에 대한 이메일 전송함.

7월 6일 일본 곽진웅 국장에게서 메일 답신 음. 7월 말까지 하반기 일정이 결정되
는 관계로 최종 의사를 확인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함. 가능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신 내용도 포함되었음.

8월 7일 브라질에 참가자 섭외하는 이메일을 김범진씨와 박상운씨에게 보냄

8월 8일 브라질의 김범진씨로부터 킨 단체 소개해 달라는 답장받음

8월 15일 브라질 김범진씨에게 KIS기획서 보냄

8월 23일 브라질에 기획서를 잘 받았는지 확인 메일 보냄

8월 23일 전체 참가자들에게 해외네트워크팀 담당자가 바뀌었음을 알림

8월 29일 중국측 섭외됐다고 준희로부터 메일받음

8월 30일 김화선씨로부터 양옥금교수 소개글 받음

8월 30일 브라질로부터 메일이 깨져서 왔다는 메일 받음

9월 2일 KIS참가여부 최종확인 답변요청메일을 6개국에 보냄

9월 2일 브라질 김범진씨에게 전화해서 심포지엄 참가 설득함

9월 4일 전체 참가자에게 전화와 우편주소 요청

9월 4일 브라질에 전화해서 김범진씨로부터 참가한다는 답을 얻음

9월 4일 독일 발제자와 연락이 안되, 이희영씨에게 전화해서 연락 부탁드림

9월 4일 미국 김대영씨로부터 연락처와 최종확인 메일 받음

9월 5일 미국에 최종확인 메일 잘 받았고, 발제문 작성방식에 대해 답장함

9월 5일 독일 발제자에게 최종확인 답변요청 메일 다시 보냄

9월 5일 독일 이희영씨에게 전화통화내용 확인 메일 보냄

9월 5일 러시아로부터 최종확인 메일 받음

9월 5일 일본 발제자(곽진웅)로부터 단체 사정으로 24일부터 참가 가능하다는 이메
일 받음

9월 6일 곽진웅씨에게 전화하여 부분참가문제 논의하고 7일 정기회의후에 연락하
기로 함

9월 6일 브라질 김범진씨로부터 발제자로 참가하겠다는 이메일 받음

9월 7일 일본 발제자 교체하기로 하고 곽진웅씨에게 전화로 발제자 섭외 요청했으
며 곽진웅씨는 24일부터 토론자로 참가하기로 합의함

9월 12일 전체 참가자에게 심포지움 진행방식 소개하고, 참가자 프로필과 연락처 보
내고, 일본 발제자(곽진웅)가 단체사정으로 토론자로 참가하게 됐음을 알
리는 이메일 보냄

9월 14일 곽진웅씨에게 일본 발제자 섭외 상황 문의 전화함, 한청련 간부 추천받음

9월 17일 한청련에 전화해서 참가 섭외함, 회의한 후 연락주겠다고 함

9월 17일 브라질에서 프로필 도착

9월 19일 전체 참가자에게 초청장 이메일로 보냄

9월 24일 일본 곽진웅씨에게 섭외상황 문의하는 전화메세지 남김

9월 25일 일본 곽진웅씨로부터 한청련에서 하기로 했으니 초청장 보내달라는 이메
일 음

9월 29일 전체 참가자에게 세부의제 파일 이메일로 보냄

10월 5일 일본 한청련 공동대표들에게 세부의제 파일 이메일로 보냄

10월 9일 일본 한청련 공동대표 송승재씨 만나 최종참가 확인함

10월10일 러시아 발제자 섭외자로부터 러시아 발제자(리나탈리아)가 사정이 생겨 못 오게 되서 발제자를 바꿔야 한다는 연락 받음, 대신 최인나씨가 오기로 결정함

10월 10일 독일 발제자(최영숙)로부터 행사관련 자료 요청 받음

10월 12일 전체 참가자에게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이메일로 보냄

10월 12일 독일 발제자(최영숙)에게 해외네트워크팀 담당자 소개하고, 심포지엄 취지 소개와 세부의제 파일 첨부함

10월 12일 러시아 발제자(최인나)에게 담당자 소개하고, 심포지엄 취지 소개와 세부의제 파일 첨부함

10월 14일 러시아로부터 전화통화 원한다는 이메일과 함께 프로필 받음

10월 15일 러시아에 전화했으나 부재중

10월 1일 전체 참가자에게 러시아 발제자가 바뀌었음을 알리고, 일본 발제자 섭외가 됐음을 알림. 또 재외동포법 개정쟁점사항정리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냄

10월 16일 러시아에 전화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문의하는 이메일보냄

10월 16일 독일 발제자에게 준비상황을 묻는 전화메세지 남김

10월 17일 독일 발제자로부터 발제문 번역을 독일에서 하겠다는 이메일 받음

10월 17일 독일 발제자에게 번역을 독일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답장함

10월 17일 독일 발제자(신효진) 프로필 도착

10월 17일 러시아에서 전화음; 비자문제 때문에 초청장 필요하다고.

10월 18일 러시아로부터 초청장에 필요한 내용 이메일로 받음

10월 19일 러시아에 초청장 팩스로 보냄

10월 18일 미국에 참가관련 문의하기 위해 전화메세지 남김

10월 21일 미국으로부터 한국입국사항과 미국연락처, 프로필 이메일로 다시 받음

10월 21일 미국에 서울에서 숙소가 필요한지 문의하는 답장함

10월 23일 독일 발제자(최영숙)로부터 프로필 도착

10월 30일 브라질로부터 행사관련 질문 이메일로 받음

10월 30일 중국에 초청장과 심포지엄 관련 서류 팩스로 보냄

10월 31일 중국에 초청장 우편발송

11월 1일 러시아에서 초청장 잘 받았으며 논평 첨부한 이메일 도착

11월 1일 러시아에 발제문 잘 받았다고 답장하고, 재외동포법 파일 첨부함

11월 2일 러시아에서 발제문 한국어로 발표가능하다고 이메일음

11월 2일 브라질로부터 발제문 조금 더 있다 보내준다고 이메일음

11월 4일 독일 발제자(신효진)에게 전화; 발제문 독촉함

11월 4일 중국에서 전화음; 비자 때문에 협조요청서 필요하다고.

11월 4일 중국에서 협조요청서 양식 팩스로 도착

11월 5일 중국에 협조요청서 팩스로 보냄

11월 5일 중국에 협조요청서 우편발송

11월 5일 미국에 전화해서 발제문 독촉

11월 6일 독일 발제자(신효진)로부터 서울 도착과 항공편에 대한 이메일 받음

11월 6일 독일 발제자에게 잘 받았다고 답장함

11월 6일 미국에서 발제문 도착

11월 6일 미국에 재외동포정책과 법개정쟁점사항정리 파일 첨부하고, 발제문 잘 받았다고 답장함

11월 6일 브라질에서 발제문 이메일로 도착

11월 7일 일본에서 발제문, 프로필 도착

11월 8일 브라질에서 발제문 받았는지 확인 이메일 음

11월 9일 브라질에 잘 받았다고 하고, 재외동포정책과 법개정쟁점사항정리 파일을 보냄

11월 9일 미국 발제자로부터 논평 이메일로 도착

11월 9일 중국 발제자로부터 발제문, 프로필 도착

11월 11일 브라질로부터 법개정쟁점사항정리 파일 다시 보내달라는 이메일 받음

11월 12일 브라질에 요청한 파일 보냄

11월 13일 중국에 전화하여 비자문제 논의

11월 14일 중국에 전화하여 비자문제 논의

11월 14일 중국에 단체 고유번호증 팩스로 보냄

11월 14일 러시아 발제자에게 논평 한글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함

11월 14일 독일 발제자에게 서울 도착 문의하는 전화메세지 남김

11월 15일 독일 발제자(최영숙)에게 18일 서울 도착한다는 이메일 답장 받음

11월 15일 독일 최영숙씨에게 발제문 번역 문의하는 이메일 보냄

11월 15일 러시아 발제자에게서 논평 한글 파일로 받음

11월 15일 러시아 발제자에게 한글 논평 잘 받았다고 답장하고 노어로 된 논평도 부탁함

11월 15일 일본 발제자 한국에 도착했다는 이메일과 전화받음

- 11월 16일 러시아에서 노어 논평 파일 이메일로 받음
- 11월 16일 러시아에 노어 논평 잘 받았다고 답장
- 11월 16일 독일에서 발제문 이메일로 도착함
- 11월 16일 독일에 발제문 잘 받았다고 하고, 논평도 부탁하는 이메일 보냄
- 11월 17일 일본 발제자에게 일제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부분에 관한 발제문 부탁과 번역문 감수 부탁하는 이메일 보냄
- 11월 18일 전체 참가자에게 보내주신 발제문과 논평에 대해 감사드리고, 한국여행시 유의사항(날씨, 항공권 영수증)과 금요일 저녁모임에 대한 공지를 이메일로 함
- 11월 18일 일본 발제자에게 번역문제 상의하기 위해 이메일 보냄
- 11월 18일 독일에서 논평 도착함
- 11월 19일 중국에서 논평 도착함
- 11월 19일 미국 발제자가 금요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하는 관계로 저녁 모임참석 어렵다는 내용의 이메일 받음
- 11월 19일 미국 발제자에게 알겠다는 답장보냄
- 11월 19일 미국 발제자와 통화; 행사시간보다 일찍와서 간단한 OT하기로 함
- 11월 20일 일본 발제자에게 발제문 번역문제로 전화연락 급히부탁하는 이메일보냄
- 11월 20일 일본 발제자와 전화통화; 법개정쟁점사항정리 파일을 보내줄 것을 요청받았고, 논평독촉함
- 11월 20일 일본 발제자에게 법개정쟁점사항정리 파일 이메일로 보냄
- 11월 20일 일본 송승재씨에게 발제문 감수 부탁함
- 11월 20일 일본 발제문, 논평 이메일로 도착
- 11월 20일 미국발제자에게 발제문, 논평 한국어 번역문 보냄
- 11월 21일 일본 논평 감수해서 송승재씨에게 보냄
- 11월 22일 브라질 발제자로부터 논평 번역하기 힘들다고 이메일음
- 11월 29일 참가자들에게 심포지엄이 성공리에 끝났음을 감사드리는 메일보냄

2. 평가영역

- 6개국 초청대상자 확정 및 지속적인 의사소통 유지
- 의제에 대한 사전홍보, 연구의뢰 및 단계적 점검

- 시기별 KIS 한국준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및 피드백
- KIS 종료 후 KIN의 해외 자문위원으로 조직화

3. 6개국 초청대상자 확정 및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잘했는지

초반(1~7월) 미국, 일본, 러시아는 초청 발제자를 섭외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독일, 중국, 브라질은 발제자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중 독일과 브라질은 한글로 된 파일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 섭외가 힘들었는데, 특히 브라질은 초청 대상자들로부터 7월까지도 아무 답신을 받지 못했다. 중국의 경우는 적합한 발제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중반(8~9월) 브라질은 영문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로 설득하여 발제자를 섭외하게 되었다. 중국측도 토론자에 의해 발제자가 섭외되었는데, 중국의 경우 이메일을 교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다. 독일 발제자는 장기간 여행중이어서, 대신 섭외자인 이희영 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영문 이메일과 전화, 팩스를 이용한 덕분에 브라질, 중국 발제자 섭외가 완료되었다. 일본의 경우 초기 발제자로 섭외된 박진웅 씨가 부분참가만 가능하다고 하여 한청련 공동대표로 교체하게 되었는데 역시 전화와 이메일 모두를 이용하였다.

후반(10~11월) 10월 초 러시아 섭외자인 최종술 씨로부터 러시아 발제자인 리나탈리아 씨가 사정이 생겨 못 오게 됐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대신 최인나 씨가 오기로 결정이 되었다.

약평

6개국 모두 1인 혹은 2인씩 초청 대상자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은 무난하게 이루어졌다.

해외에 한글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서 한글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영문과 함께 보내 확인을 하고, 이메일로 불가능하면 전화와 팩스 등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섭외가 6개국 전부 발제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한 동인이었던 것 같다.

8월 중에 해외넷웍팀의 담당자인 배덕호 씨는 KIN의 다른 행사 준비 관계로 바빠 해외넷웍팀을 원활하게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KIS를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활동의욕을 상실하여, 본인이 해외넷웍팀에 자원하여 담당하기로 했다. 담당자의 교체로 중반기에 초청 섭외자들 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이후 의사소통에 별탈없이 교체가 이루어졌다. 다만 초청 발제자가 후반기인 10월까지도 교체되는 사정이 생기기도 했으므로 그때그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또한 국제전화의 경우 시간대를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일반 전화보다는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전화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KIS 의제에 대한 사전홍보, 연구 의뢰 및 단계적 점검

KIS기획서를 보내 사전홍보를 하였고 9월 29일 세부의제를 보내 연구를 의뢰했다. 세부의제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전화를 통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러시아, 일본의 경우는 미처 세부의제에 관한 부연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세부의제에 대한 질의서에 관해 큰 오해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재외동포 정책이란 해외에 사는 브라질인, 러시아인, 일본인에 대한 각국의 자기나라 동포에 관한 정책을 묻는 것이었는데, 이들 초청 발제자들은 이를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에 관한 정책인 줄 알았던 것이다. 이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재외동포 초청자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의제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실책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심포지엄을 준비하며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차후에는 재외동포 초청자들이 의제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시기별 KIS 한국준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및 피드백

초청 발제자들을 섭외하고, 발제문을 취합하는 일에 매몰되어 한국측 준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국측 준비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일들을 미리 홍보했다가 다시 변경 사항을 알렸을 경우 참가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까 우려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확실히 결정난 사항만 알리고자 했고, 대신 발제자가 참가 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적어도 발제자에게 대략 어떤 식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될지 그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상황 홍보는 필요했다고 평가한다. 이 정도의 홍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경험부족 때문이라 할 것이다.

6. KIS 종료 후 KIN의 해외 자문위원으로 조직화

제2회 KIS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초청 발제자들은 모두 제2회 KIS 심포지엄의 현지 준비 책임자가되기로 결의하였다. 자문위원으로 조직화하려는 이유는 지속적인 소통의 관계를 만들면서 KIN 활동에 자문을 구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제2회 KIS 심포지엄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KIN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문위원으로 조직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우연을 통해 맺은 인연”

최 인 나 (쌍뜨 빼쩌르부르그대학 전임강사)

나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살고 있는 4세 재외동포이자 고려인이다.

어느날 내가 아는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나보고 한국에 가서 KIN 심포지움에 참가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덧붙이셨다. 내가 KIN과 KIS 심포지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서 한편으로는 무척 가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와 같은 모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기도 했다. 결국은 가야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하지만 며칠 뒤에 KIN에서 보내 준 발표과제를 읽고 나서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KIN담당자인 김영희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런 나의 주저하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달래주는 영희씨 목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것 같아 이번 심포지움이 재미있고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알려준 마감날까지 발표내용을 준비하느라 며칠동안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심포지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해외 소수민족이나 이주 정책에 관한 지식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더욱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동기가 바로 이 심포지움이다. 나는 며칠 동안 발표내용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됐으며 한편으로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같은 세미나에서 참가해 보고 싶은 이유가 또 있었다. 내가 여태까지 참가한 세미나는 대부분 학술회의나 한국어와 관련된 세미나였는데 KIN에서 열린 심포지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제였다. KIN 심포지움은 해외 6개국 재외동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각국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여러나라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사회 내에서의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길 바라며 준비됐다.

또한 KIN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은 나도 한 때 한국 명예영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재외

동포법에 관한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지나쳤을 뿐, 이에 대해 누구와도 자세한 이야기나 토론을 할 기회가 없었다.

물론 KIN 이외에 한국내에서 '한민족'이라는 혈통적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적지 않은 재정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KIN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호한 조건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N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이와 같은 심포지움까지 개최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칭찬과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참가 4일 동안 이러한 KIN 회원들의 열정과 노고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물론 이번 심포지움에서 지적할 점도 있지만 원만한 전체 분위기에 속에 자연스레 파묻힐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서 추진위원회나 참가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이 모임을 이끌어 가는 데에 결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모임이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 마음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남아 있는지도 역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KIN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지금도 정이 든 선배나 동생의 얼굴들이 또렷하게 떠오르곤 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돼서 그런지 또는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런지 국제적인 심포지움이라기 보다 한 학교 동아리의 따뜻한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즐거운 '앞풀이', '뒷풀이'까지 있어서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또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브라질에서 온 재외동포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 참 반갑고 보람있는 일이었다. 내가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며 그들이 해외거주하면서도 진정 자기 민족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자기들도 살기 위해 바빠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KIN의 회원들 스스로가 함께 모여서 재외동포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이 멋있고 아름다워 보였다.

얼마전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교포 고려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 그는 한국에 와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되어 어느 시골양계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미에서 KIN이 하는 일은 규모는 작아도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한국에서 반드시 해

결해야 될 하나의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KIN과 같은 NGO 단체가 영향을 끼쳐서 성공적으로 이런 과제를 해결할 경우,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그 권위와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고 각국에 있는 재외동포사회도 그 영향을 받아 더욱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때문에 이번 심포지움에서 작성한 선언문이 단지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맺게 된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건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한 동기가 되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